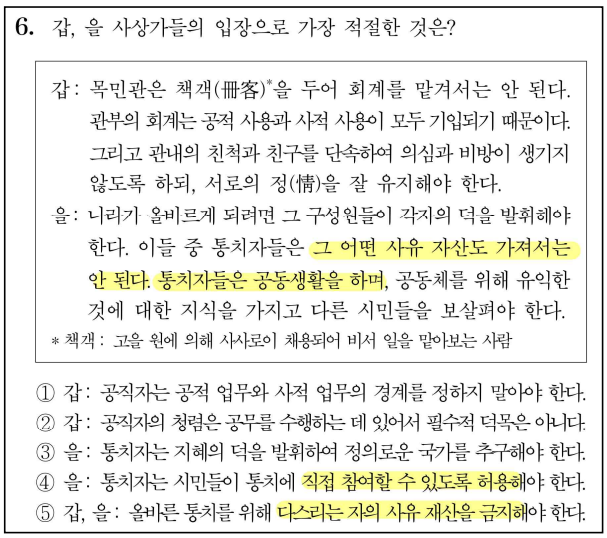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활연관통 총평

1. 표현보다는 내용, 개념 자체에 집중한 시험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교육과정이 바뀐 후 처음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한 시험으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난해한 표현이나 함정 선지를 통한 변별력 유지보다는 묵직한 개념 그 자체에 집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념 공부를 꼼수 없이 묵직하게 해 온 학생들이나, 기존에 윤리와 사상을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매우 쉽게 느껴졌을 시험이라 생각이 든다. 다만, 개정 생윤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에 대한 공부가 미비했던 학생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

2. 묵직해진 생윤, '개념'이 필요해진 생윤

이번 6평이 주는 느낌은 수능특강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과 상당히 유사했다. 윤사에 비해 훨씬 라이트했던 생윤이 상당히 묵직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6평과 수능특강 모두에서 기존에 핵심 주제 몇 가지에 대한 가벼운 이해에 제시문 독해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던 문제 구성에 비해, 훨씬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래 문항들을 다시 검토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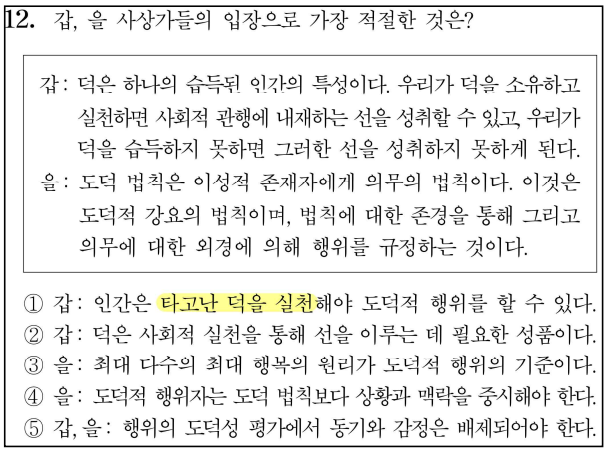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을: 나라가 올비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지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 책객: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① 갑: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③ 을: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④ 을: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갑, 을: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을: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① 갑: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갑: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③ 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④ 을: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사유재산론이나 공동생활론의 경우 윤사에서만 직접적으로 다뤄지고, 생윤에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주제 중 하나이다. 나는 이번 수능특강을 검토하면서 **연계교재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더라도, 그 출제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고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문항을 보고 나는 기존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 이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던 점은, 평가원이 이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억지로 엮어서 문제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우선 정약용의 청렴 관련 내용은 '직업과 윤리' 단원에서 다뤄지는 개념이고, 플라톤의 제시문이나 선지의 내용은 '국가와 시민의 윤리' 단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개념에 가까워보인다. 즉, 이 문항이 시사하는 또 하나는 평가원이 **상이한 단원 간의 융합을 통해 문제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12번 문항에서도 평가원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띈다. 우선 1번 선지의 오답 근거 구성 방식이 윤사의 구성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기존까지 생윤의 오답 선지 구성 방식은 '서술어'를 틀어버리거나, 아예 사상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엮어서 구성해왔다. 그러나 12번에 1번 선지처럼 이제는 **관형어 수준까지 꼼꼼히 보고 정오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도가 드러난 문항이나 선지가 이것 하나라서 이렇다하고 말하기는 아직 성급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윤에서도 윤사처럼 개념을 더 강조하면서 핵심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물어보고자 하는 시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단순히 옳다 그르다 혹은 해당하는가 아닌가 수준에서의 정오 판단이 아니라 완벽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2단원에서 이번에 배려윤리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4번이나 5번 선지 등과 같이 정의윤리와 심정윤리 느낌으로 상대적인 오답 선지로 구성한 모습이 돋보인다. 따라서 배려윤리 부분도 잊지 말고 오답 선지 수준으로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전체 구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의식주 윤리와 같이 기존에 학생들이 공부 안하는 주제에 마치 2014년도 시험처럼 사상가의 입장을 덧입혀서 출제한 것이 드러난다. **소주제에 대해서도 사상가 중심으로 꼼꼼히 봐두자**.

3. 6평을 통해 바라본 9평과 수능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음 메인 출제 주제는 무조건 **니부어**다. 니부어는 제발 꼼꼼히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뇌절 수준까지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6평에 니부어가 안 나왔다는 것은 다음 9평이나 수능에서 벼르고 니부어를 내겠다는 평가원의 의지라는 것을 명심하자. 작년부터 니부어가 평가원이 가진 마지막 보루라는 느낌이 든다. 활연관통 칼럼을 통해 니부어에 한해서는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면 좋겠다.

또 앞서 설명했듯이, 작년부터 드러나는 기조 그대로 소주제에 대한 강화된 출제 방침이 눈에 매우 띈다. 작년까지 소주제의 출제 방침이 꼼꼼한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느낌이었다면, 올해 6평에서 드러난 출제 방침은 의식주 윤리와 같이 소주제에 대해서 사상가를 덧입혀서 '볼노브의 거주', '공자와 불교의 식사 윤리'와 같이 출제한 것이 드러난다. 새로운 시도인 동시에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소주제에 나오는 사상가까지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자.

4. 따라서 앞으로의 생윤 공부는 묵직하게

수박 겉핥기식의 가벼운 공부는 필패하기 마련이다. 생윤 과목 자체를 인문학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많은 제시문과 텍스트를 접하고 깊이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제발 시키는 대로 묵직하고 우직하게 공부하도록 하자.

FINAL

활연관통 생윤

생활과 윤리, 만점을 위한
최고의 수험서, 활연관통

STEP 11

기출 제시문 총정리

당신의 1등급이 이 교재의 철학!

현우소 활연관통 6모대비

GOD's MASTER PLAN

THEME8. 국가와 시민의 윤리

※ 아래 제시문에 해당하는 사상가를 다음 빈칸에 바르게 적으시오.

	제시문	정답
1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중략)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주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면에서 국가 성립 이전의 단계인 여러 공동체와 마찬가지 성격을 갖는다. 국가는 이런 여러 공동체의 종착역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3	무력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한다.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하니, 칠십 명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복종한 것이 그 예이다. “시경”에서 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것에 대해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것을 말한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4	어진 정치를 실행하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존중해 덕을 지닌 현자가 합당한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직책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없어지거든 그때에 이르러서 정치와 형벌을 밝게 시행하면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5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 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중략) 코먼 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 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6	국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7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행위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8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9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 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0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 는 것이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1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 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2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므로[兼愛交利] 필히 상을 받지만, 하늘의 뜻에 반하는 자는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며 적대시하므로 필히 벌을 받는다.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자는 차별 없이 사랑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윗사람의 뜻을 따라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3	인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인간은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므로 이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상벌의 주도권이 신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신하를 따르게 되므로 군주는 상벌을 주도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4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너도 너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나와 마찬가지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에 있다.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시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5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기반 위에 세워졌다.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노력을 한 조상들과 희생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6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하찮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7	무력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이 부 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한다.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 으로 복종할 것이다. 또한 어진 정치를 실행하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존중해 덕 을 지닌 현자가 합당한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직책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8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 을 성향에 따라 적기에 하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이다. 이들 중 가장 훌륭한 자로서 슬기롭고 유능하며 나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금은을 다루거나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19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0	국가는 사람들 간에 합의하여 만든 공동체이다.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1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법을 준수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라도 그 법을 위반할 것인가?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하며,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2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합법적인 수단이 소용없을 때는 정당하게 시민 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3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간에 최소화 되어야 한다.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할 때뿐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4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한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이다.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5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 하에 놓인 노예 로 만들고자 할 경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인간이 사회 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므로 그러한 신탁 조건을 어긴 위정자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6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진실로 그 자신을 바르게 해야 정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하기 어렵다.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7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명확한 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을 제시하여 장차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혼란을 구하고 천하의 재앙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군신이 서로 친밀해지고 부자(父子)가 서로 감싸 주고 다투다가 사망하거나 붙잡히는 염려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8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자연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해야 하며 자연인을 보호하고 방 위해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힘과 권력을 한 인간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한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에 있으므로 통치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29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30	시민 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다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그릇된 것일 때 가능하다.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단언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간단한 규칙은 없다. 다만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전체에 가져올 손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31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32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 생겨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33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2017학년도 수능]	
34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2018학년도 6월]	

35	로크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이 어떤 나라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따라서 복종의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36	시민 불복종은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37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38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2017학년도 6월]	
39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이 없다.	
40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2017학년도 수능]	
41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2018학년도 수능]	
42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2018학년도 9월]	
43	기본적으로 불복종이란 합의된 정의관에서 벗어난 법이나 제도, 정책에 대하여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44	다수의 지배가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다수가 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다수가 아니라 양심이 옳고 그름을 실제로 결정하는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45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2017학년도 6월]	
46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들을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해서 행하는 것이다.	
47	시민 불복종은 법적·제도적 측면이든 도덕적 측면이든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법률이나 정책이 지금 당장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고, 미래 세대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정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현재의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또한 처벌에 저항함으로써 국가 행동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동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48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이나 명령을 바꾸는 혁명적인 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비폭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49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50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2018학년도 6월]	
51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 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52	○○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는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법률에 불복종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53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54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열매와 거기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된다."라는 재산권 이론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2018학년도 9월]	

FINAL

활연관통 생윤

생활과 윤리, 만점을 위한
최고의 수험서, 활연관통

STEP IV

정답과 해설

당신의 1등급이 이 교재의 철학!

현우소 활연관통 6모대비

GOD's MASTER PLAN

8. 국가와 시민의 윤리

1	아리스토텔레스	21	소로	41	롤스
2	아리스토텔레스	22	롤스	42	롤스
3	맹자	23	밀	43	롤스
4	맹자	24	맹자	44	소로
5	홉스	25	로크	45	롤스
6	로크	26	공자	46	로크
7	싱어	27	한비자	47	소로
8	싱어	28	홉스	48	롤스
9	소로	29	롤스	49	롤스
10	롤스	30	싱어	50	소로
11	로크	31	로크	51	로크
12	묵자	32	롤스	52	소로
13	한비자	33	소로	53	소로
14	홉스	34	롤스	54	로크
15	민주주의	35	로크		
16	민본주의	36	롤스		
17	맹자	37	롤스		
18	플라톤	38	소로		
19	아리스토텔레스	39	소로		
20	로크	40	롤스		